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2년 12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2년 12월 8일 ~ 2012년 12월 21일

주요 키워드

1.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통령 당선 : 대선 전 보건의료계에서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선언이 잇따랐으며, 의협에서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후보 공약을 높이 평가하는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공약 비교'를 발표하기도 함. 박근혜 후보는 20일 당선이 확정되었고, 주요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점진적인 급여 확대, 공공의료 부분적 확대, 영리병원에 대한 제한적 허용,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반대 등을 내세움. 보건의료계에서는 향후 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임.
2. 테바(Teva)-한독약품 합작회사 설립 : 14일 한독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한독약품이 자가약 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이스라엘 다국적 제약사 테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음. 17일 합작회사 설립이 확정되어 테바 51%, 한독약품 49%의 지분을 가짐. 테바는 오리지널 및 제네릭을 공급하고, 한독약품은 영업·마케팅·유통·대관 업무를 담당함.
3. 기타 : 13년 의원 수가인상을 2.4% 결정, 다국적 제약사 노조 '한국민주제약노조' 창립, 천연물 개량신약 약가 산정 방식 결정 등이 있음.

1. 대선과 보건의료정책

○ 전국 약사 1004명, 보건의료혁신포럼 문재인 후보 보건의료 정책지지 (12. 9, 11)

문재인과 함께하는 국민건강권 실현 약사모임은 9일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전국약사 1004명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약사모임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며, 보편적 복지국가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찬성한다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 평등한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중보건약사제도와 성분명 처방 등의 정책 실천을 강조했다.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보건의료혁신포럼은 11일 지지선언문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실현을 위한 길에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며 안철수가 선거운동 지원을 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그의 대통령 당선을 희망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혁신포럼은 국민안심의료·일자리 창출·미래지향혁신의료를 정책으로 내세워 문재인 후보와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본방향이 다르지 않고 공통점이 더 많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파적 거국내각 구성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께서 보건의료혁신포럼의 정책과 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보건의료인들의 지혜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보건복지공약 (12. 10)

TV 토론회에서는 국민 질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공약 및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

근혜 후보는 한국형 복지 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며, 비효율적 정부 지출을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40%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자의적인 재량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 정책 정부와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를 통해 성장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며, 복지·교육·간병 등을 통해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후보는 복지를 늘리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초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는 정책 실현 방법이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하며, 암·중풍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국가가 책임지고,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에게 외래와 입원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현재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자부담하는 환자수가 350만명 정도이고, 1,000만원 넘게 지불하는 환자가 100만명 정도 된다고 하며, 우선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부터 9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계, 공개지지 선언 잇따라 (12. 12)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사회 회장 등 의사 1,219명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1일 문재인 후보 지지 치과 의사 선언 추진모임 1,051명은 민주통합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선언문 발표와 함께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위한 시민사회 청원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보건 의료혁신포럼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선언문에서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인틀니·치석제거 보험 적용대상 확대로 치과 보장성 강화, 장애인 공공 치과병원 확대, 아동 및 청소년치과 주치의제도 시행 등의 구강보건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중앙선대위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 치과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치과계 정책현안집을 전달받았다.

미래의사포럼 소속 의사 7,070명은 11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의 의료공약이 의료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가 발생하는 10조원의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한 급여화는 5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치켜세우며, 적정수가 반영을 통한 과잉진료 방지·진료시간 확대 등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생 2,123명은 박근혜 후보가 플롤렌스 나이팅게일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며, 한국 간호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 해안을 가진 대통령 적임자라고 전했다.

○ 보건의료단체 투표 독려 (12. 14)

의협은 대선 당일인 19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의료기관을 열고, 내원한 환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해 대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휴일 진료 공백을 막고 대다수 직장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이번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해, 대선당일 진료안내 및 환자투표독려문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 건치, 약준모 등의 보건의료단체들도 대선 투표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보건의료인들의 투표권 보장이 힘든 점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단축진료를 독려하고 확산하기로 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공약 비교 발표 (12. 14)

의협은 '대선주요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서'를 발표하여, 16개 시도의사회와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했다. 의협은 지난 6일 주요 대선후보에게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공식질의서를 발송하여 13일 회신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보장성 강화계획이 박근혜 후보보다 더 큰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리한 급여화 항목 확대 계획, 간병비 급여화 등이 건보공단의 재정안전성을 해치고, 의

료공급자의 저수가체계를 강화하여 오히려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근거이다. 두 후보 모두 일차 의료활성화를 약속하였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는 적정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지급과 의료정책입안에서 의료인 참여확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과 2만 병상 공공의료기관 병상확대 계획 등이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전면 반대의사를 표했고, 문재인 후보는 대체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문재인 후보 측이 박근혜 후보 측보다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의협은 이 자료가 회원 및 국민들이 대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작했으며,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는 각 회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계 2만4000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12. 18)

민주통합당 국민건강복지특위는 18일 오후 2시 보건의료인 24,000인의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에는 의사·약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조리사·뷰티인 등 보건의료복지계 종사자들이 참여한다.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슬로건에 우선 부합하는 영역이 보건 및 복지 분야라며,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것은 그가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를 실천할 후보라고 인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당선자, 보건의료정책 전망 (12. 20)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0일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우선 10년 기준 64.9%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리고 암·심뇌혈관 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점진적인 급여확대를 약속하여, 현재 75% 인 것을 16년까지 10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급여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재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도 발의할 계획으로 보인다.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낙후 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진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건소 기능 개편을 공약하였었다. 그리고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면서도, 영리병원 자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의료산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 각 의업단체,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요구사항 (12. 20)

한국계약협회는 제약산업의 발전과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균형 있는 약가정책을 추구하고 시장형실거래상환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유통질서의 왜곡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했고, 제약산업 육성 및 신약개발 R&D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14일 당선이 확정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등 완전의약분업을 실현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개정 의료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신문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을 세우고, 불필요한 규제와 공권력의 남용을 줄이고 의사들에게 값싼 치료를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의 공급자 규제 중심의 정책을 개선하여,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고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대선 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미래의사포럼 회원들도 형평성 있는 정책과 적정수가 반영을 주문했다.

2. 보건의료 정책

○ 식품의약품안전청,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2. 10)

식약청은 혈장분획제제 등의 의약품에 사용되는 혈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6일부터 원료혈장의 채혈·수집·보관·운송까지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마스터파일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료혈장 실태조사 세부 기준 마련, Look-Back 시스템 마련으로 이상혈액 사용 차단 등을 추진한다. 이는 혈장제조업소 실태조사 주체가 대한적십자에서 식약청으로 변경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은 07년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이번에 의무화 되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실행추진단' 출범 (12. 11)

추진단은 심평원 11월 9일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에서 발표한 가치중심 심사평가 체계 구축,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지원, 소비자 의료선택권 보장 등 28개의 세부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추진단에는 심사평가연계팀, 의료서비스 혁신팀, 소비자의료선택보장팀, 보건의료정책지원팀, 인프라선진화팀 등 5개팀 21명의 의료심사평가 실무진과, 의료계와 학계 등의 전문가가 중심이 된 자문위원회가 실행 방안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제한 280여개 급여기준 전면 검토 (12. 12)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기준은 1,600여개로, 이중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280여개 정도이다. 이들 항목은 특정검사와 수술에 있어 인정 가능한 적응증을 정하거나, 보험급여가 가능한 기간과 횟수 등을 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위급상황에서 진료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의 급여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외상학회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받아 처리 중이다. 여기에는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가산 현실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횟수 제한 완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도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등급 인정 (12. 12)

희귀난치성 질환자 정모씨는 운동기능이 위축되는 '근긴장성이영양증'으로 인해 07년부터 종합병원에서 장애등급 6급의 판정을 받았지만, 11년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는 장애등급 판정에서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법령에 따르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자 개인의 신체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권익위가 결정했고, 국민연금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장애등급을 인정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에도 장애 판정기준 상 명확히 일치하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 등록이 어려웠던 동일 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타민D 결핍증 환자 증가 분석 (12. 14)

비타민D결핍증은 비타민D가 부족하여 성장 장애 또는 뼈의 변형이 생기는 질환으로, 구루병 또는 골연화증으로 알려져 있다. 심평원이 07~11년 심사결정자료를 통해 '비타민D결핍증(E55)'에 대해 분석한 결과, 07년 1,800여명이던 진료인원이 11년 16,00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억 8,000만원 정도에서, 21억 1,000만원 정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점유율이 크게 늘어, 07년 전체의 31.4%에서 11년 49.1%로 늘었다. 최근 비타민D 결핍증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모든 연령에서 햇빛이 있는 낮 시간의 야외활동이 크게 줄고, 자외선 차단 크림 등의 남용으로 피부에 닿는 햇빛을 차단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치매환자 급증 발표 (12. 16)

보사연은 '노인 의료이용 증가고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해, 하루 동안 병원에서 치매로 외래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99년 10만 명당 평균 8.2명에서 10년 66.4명으로 8.1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11년 동안 노인 치매 외래환자의 연평균 증가율도 25.4%에 달해 노인 관련 주요 질환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이어 파킨슨병(14.6%), 결장·직장암(9.0%), 간암(8.3%), 요추·추간관 장애(6.6%), 당뇨병(6.3%) 등의 순이었다. 주요 원인으로 평균 수명 증가와 노인들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 증가를 뽑았으며, 20년까지 노인치매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평균 17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12. 17)

협의회는 손건의 복지부 차관 주제로, 식약청·질병관리본부·건보공단 등 9개 관계기관의 장이 참여하였다. 이는 프로포폴 안전관리·의료기관 감염 등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협의회는 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안전관련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 토론 주제는 보건복지부가 ①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현황 ② 의료기관 인큐베이터 관리현황 ③ 환자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④ 미용성형수술 오남용 예방대책을 논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⑤ 벤조피렌 후속조치 및 식의약 안전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⑥ 고카페인(에너지) 음료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질병관리본부 ⑦ 의료관련 감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건강보험공단 ⑧ 건강검진기관의 내시경(위·대장) 장비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⑨ 과잉 척추수술 방지 방안, 보건산업진흥원 ⑩ 외국인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 18)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해 1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0원에서 172원70전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것으로 기대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완료 (12. 18)

복지부는 위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쳐 곧 공포될 예정이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를 거쳐 곧 발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2등급, 42~62시간 → 4등급, 42~103시간)한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하고,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인상(8300원→8550원),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실시한다.

○ 한중 사회보험협정, 내년 초부터 발효 (12. 18)

정부는 지난 10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체결한 협정이 이르면 13년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양로보험)과 고용보험(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파견근로자는 최장 13년까지, 현지채용근로자는 5년까지, 자영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상대국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며 소득이 있거나, 중국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한국 근로자가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도 면제한다.

○ 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 결과, 기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발표 (12. 20)

통계청은 보건·교육·가족·환경 부문에 대해 약 3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건소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환자 중 64.3%가 만족을 나타냈고, 뒤이어 종합병원(53%), 한방 병의원(52.4%), 병의원(46.9%), 치과 병의원(44.5%) 순으로 조사되었다. 약국 및 한약국은 28.3%만 의료서비

스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는 비싼 의료비, 치료결과 미흡, 긴 진료 및 입원대기 시간, 불친절, 과잉진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0세 이상 인구 중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사람의 비율인 유병률은 24.1%로 10년(20.7%)보다 증가했다.

○ 2013년 의원 수가인상률 2.4% 최종 결정 (12. 21)

21일 개최된 건정집에서는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심의·의결하여, 2.4%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이 제시한 2.4%인상안과 패널티를 적용하는 2.2% 인상안이 논의되었다. 다만 의협이 계속 건정집에 불참한다면 내년도 수가 결정에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부대결의를 첨부했다. 이로서 내년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6% 인상되며(추가 재정소요 6,386억원), 유형별로는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가 인상된다. 이런 결정에 대해 의협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건정심의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결의에 대해서도 건정심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불참하겠다고, 추후 수가만 결정하는 수가결정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내용의 개정 입법안이 발의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3. 보건의료 산업/기술

○ 서울대 관악 첨단치과의료센터 기공식 (12. 3)

서울대학교 첨단교육연구복합단지 및 치과병원 첨단치과의료센터 신축사업 기공식이 지난 3일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열렸다.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 설계를 목표로 건축되며, 치의학대학원에는 실험실·교수연구실·동물실 등이, 치과병원에는 진료실·연구실·세미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대는 치과병원 첨단치과의료센터 설립과 관련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서울대 치과병원 등과 갈등을 빚어왔으나, 대한치과협회의 중재 끝에 지난 7월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 사업 추진 (12. 12)

이는 의료기기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시장진출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주관기관(의료기관)은 테스트 제품을 평가하고, 참여기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산 신제품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테스트가 종료되면 정부는 테스트 성공 결과를 공개해 국산 신제품의 홍보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2년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6개 의료기관과 8개 제품의 테스트를 수행했다. 13년에는 주관기관 대상을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타 진료과 및 의료기관과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테스트 수행기간을 9개월로 확대하고, 정부지원금을 최대 4,000~6,000만원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상에 이의신청 (12. 12)

신용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예 따라 보험료 납부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1.99~2.4%로 높여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상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50억 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되어야 하고,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또는 일부 폐지가 불가피하다. 공단은 또한 사회보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지방의료원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발족 (12. 13)

연합회는 위원회를 발족하여 13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자문위원으로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 등 11인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 공공병원 브

랜드 가치 향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34개 지방의료원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네트워크 활용이 쉽고, 지역 자원과 연계 가능한 의료 관광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 확대·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인재 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미국 국립보건원(NIH), 보건의료 R&D 국제협력 위한 LOU 체결 (12. 14)

양 기관은 14일 미국 현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향후 양국의 보건의료분야 관련 연구 발전 도모 및 인력교류의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연구자 교육훈련·연수 기회 확대, 공동연구과제 추진, 연구를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식 및 출산 관련 역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VSTA사업(고급인력 지원사업)의 지원 분야를, 암질환·뇌신경질환·심혈관질환 등 주요 중점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R&D 관련 상호 인력 및 정보 교류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제주중앙병원, 의과대학 설립추진 (12. 17)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은 13년 2월 입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김덕용 이사장이 자신 및 가족의 재산을 추려내 대학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 중앙병원(223병상)과 13년 2월 개원 예정인 S-중앙병원(650병상)을 부속병원의 소속 의료진을 활용할 계획이다. 재단은 입학정원을 40명으로 하고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되, 의무적으로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서 4년간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해 지역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QI) 우수사례 발표회 (12. 17)

QI활동 우수사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 중순부터 5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23개 기관 26개 사례 중 선정했다. 우수사례에는 급성심근경색증·대장암·수술예방적 항생제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들이 선정되었으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남원의료원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상 1기관, 최우수상 2기관, 우수상 3기관을 선정하였다. 발표자들은 질 향상의 주요요인으로 다학제팀 구성 및 활동·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꼽았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QI 교육서비스, QI 컨설팅, QI활동 우수사례 발굴, QI 뉴스레터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영국 국립생물표준통제연구원과 줄기세포은행 운영 MOU 체결 (12. 17)

이는 한국과 영국의 줄기세포은행 운영 및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영국의 통제연구원은 자국 내 줄기세포 고품질화, 표준화 및 안전 관리를 위해 03년부터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국 줄기세포은행(UK Stem Cell Bank)을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한국과 영국의 줄기세포주 및 관련정보를 공유해 줄기세포은행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줄기세포 국제 표준화를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연구원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재생의학센터(NIH CRM, 10월)와 독일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재생치료센터(BCRT, 5월)와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2012 포스텍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바이오 5대 연구성과 (12. 18)

이는 BRIC에서 운영하는 과학설문사이트 SciON(사이온)에서 345명의 생물학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분야별로 의학적으로 영향력이 큰 연구성과,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연구성과, 사회·경제학적으로 파급력이 큰 연구성과, 바이오 분야 뉴스 등 각각 5건이 선정되었다. 건국대학교는 줄기세포교실 한동욱 교수가 '기존 줄기세포의 문제를 개선한 유도신경줄기세포 개발' 연구로, 의학적 영향력이 가장 큰 연구성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체세포를 신경줄기세포로 직접교차분화해 '유도신경줄기세포'를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며, 과학저널인 '셀 스템 셀(Cell Stem Cell)'지 4월호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4. 제약산업

○ 리베이트 연루 의약사 대거 소송 준비 (12. 10)

복지부는 최근 모 제약회사 리베이트 건에 대해, 사법처리가 종결되어 형이 확정된 의약사 85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된 의약사들로, 검찰이 내린 벌금액수에 따라 면허자격의 정지기간이 다르다. 이에 의협은 최근 소송을 준비하는 회원에 대해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는 지난 달 확인 결과 47명이었다. 대법원에 넘어간 K제약 리베이트 건 역시,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약사들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수술자 중 100여명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제소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안 윤곽 마련 (12. 10)

위 제도는 제약회사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할 때 미리 제출한 예상사용량 보다 실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했거나, 전년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 국정감사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는 인하폭을 15~20% 수준으로 검토하여, 최고 10%인 지금보다 대폭 조정된다. 정부는 이런 검토안을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 발표 이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침으로는 총 사용액의 상한선을 정해 금액이 큰 약제들의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는 것, 사용금액 수준에 따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약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일부 제약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항암제 '아비스틴', 약효 의심 사례 잇따라 등장

미국 플로리다대학 연구진은 '임상종양학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아비스틴을 추가로 복용 하더라도 초기 단계 대장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2~3단계의 대장암을 가진 환자 중 수술을 받은 2,673명 중 절반에게 플루러유러실(fluorouracil) 등 표준 치료약으로 6개월 동안 치료하고, 나머지 환자에게는 상기 약에다 아비스틴을 1년간 복용하게 했다. 하지만 양 그룹의 환자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 아비스틴을 추가 복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학 종양학과 연구진 또한 아바스틴 추가 복용이 다른 유방암 치료제 단독복용보다 무병 생존율을 높여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구들은 또한 아비스틴 추가 그룹이 중증고혈압과 울형성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다른 치료제 그룹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대장암·유방암·폐암·신장암 등에 대한 생존기간을 늘려준다고 주장한 로슈사의 주장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 신풍제약, 리베이트 품목 109개 1개월 판매금지 (12. 11)

식약청은 신풍제약의 신풍젠타마이신황산염크림' 등 109개 품목에 대해,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07년 이후 공정위가 리베이트를 적발한 32개 제약사에 대한 처분으로 앞서 태평양제약 등이 처분을 받았다. 신풍제약은 처방·판매 촉진 목적으로 08년 1월부터 10년 1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물품지원 행위 등을 하였다. 이번 리베이트 행정처분 품목 규모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로, 신풍제약에 큰 매출타격이 예상된다.

○ 다국적제약사 연합 '한국민주제약노조' 창립총회 (12. 12)

연합노조는 12일 공식출범하였고 참여사는 한국노바티스, 한국와이어스, 한국BMS, 한국안센,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파스퇴르, 줄릭파마코리아, 아스트라제네카 등 8개사다. 한국화이자제약, 사노피아벤티스, 바이엘헬스케어는 내년에 대의원총회를 통해 안건을 가결한 후 합류하기로 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상찬 노바티스노조위원장이 선출되었고, 사무처장에는 김문오 사노피파스퇴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는 유대희 한국BMS위원장이 선출되었다. 김상찬 위원장은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제약산업이 열악한 환경에 놓였는데 기업별 노조가 처한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김동명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참여하여 산별노조 전환으로 노동탄압에 맞설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민주제약노조는 다국적제약사의 잦은 ERP(희망퇴직프로그램) 가동, 강제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였고, 산별노조를 통한 사용자단체와의 공동 교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 GSK, 희망퇴직프로그램(ERP) 가동 (12. 14)

한국 GSK는 7일 ERP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사원들에게 발송하였고, 규모는 1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11년말 내근직을 대상으로 ERP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7월 영업직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또 한 차례 ERP를 실시한 바 있다. GSK 관계자는 이번 ERP가 글로벌 차원의 조직 변화 로드맵을 정함에 따른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일괄 약가인하 전후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화이자제약 역시 ERP 실시계획을 노조측에 알려 14일 노사간 첫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GSK처럼 ERP를 1년 사이 세 번이나 가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GSK 당뇨병치료제 '아반다메트' 이상반응 다수 추가 (12. 13)

식약청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반다메트의 이상반응에, 고콜레스테롤혈증·식욕증가·울혈성 심부전 및 폐부종·변비·홍반 등을 추가했다. 일반적 주의사항에도 심혈관계 이상과 저혈당 위험이 신설되었다. 시판후 국내외에 보고된 부작용에는 이외에도 부종·체중증가·소화불량·저혈당 등이 있었고,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등의 환자에 투여가 금지되었다. 한편 아반다메트는 각종 부작용 위험으로 10년 퇴출된 GSK의 아반디아에 메트포민을 결합한 약물이다.

○ 대형 품목 의약품 플라빅스·프릴리지, 내년 1월부터 판권 이전 (12. 14)

BMS와 사노피-아벤티스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판권은 앞으로 사노피가 행사하여, 양사의 한국법인도 내년 1월까지 판권 정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플라빅스는 연간 매출 1,200억 원을 넘기도 하였고, 11년 매출은 727억원이었다. 세계 최초의 조루증치료제 '프릴리지'의 글로벌 판권이 올해 6월 존슨앤드존슨(J&J)에서 원개발사인 미국 퓨리엑사에 넘어가, 한국 판권은 한국안센에서 이탈리아계 제약사 메나리니로 넘어갔다. 한국판권은 인바다코리아가 행사하는데, 메나리니는 이전에 이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프릴리지는 09년 많은 관심 속에 등장했지만 높은 가격과 약효 등으로 시장진입에 실패하였는데, 인바다코리아는 프릴리지 가격을 40%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약물의 가격은 저용량 1만4000원, 고용량 2만3000원이다.

○ 한독약품 임시 주주총회, 주주들 회사 비판 (12. 14)

이 자리는 한독약품이 50여 년간 함께해온 사노피와의 지분정리와 테바와의 합작회사 설립 등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주들은 한독약품이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소홀히 하고, 타사의 제품을 파는데만 혈안이 되어 제약회사로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국적 제약사 테바와의 합작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 한독약품이 또다시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도매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테바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임시주주총회는 상호를 한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 및 이사선임안 등이 상정되었고,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은 가자들을 만나 테바와의 문제는 근 시일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

했다.

○ 테바-한독약품, 합작회사 설립 최종 합의 (12. 17)

한독약품은 이스라엘 다국적 제약사인 테바(Teva)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약 15조원 규모의 한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테바는 다양한 종류의 오리지널 및 제네릭을 공급하고, 한독약품은 영업·마케팅·유통·대관 업무를 담당한다. 최대주주는 테바가 되며, 합작비율은 테바 51%·한독약품 49%이다. 테바는 한독약품과의 합작이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의 첫 협력체제 구축이라며, 이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테바의 목표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테바의 다양한 제네릭 제품·신약·바이오시밀러 등이 한국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고, 국내 제약시장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독약품은 그란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의 국내 도매상 역할을 하였고,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될 당시에도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독약품이 의약품 외의 다양한 사업군에도 손을 뻗으려는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 리베이트 적발 12개 품목, 13년 2월부터 약가인하 예정 (12. 17)

진양제약과 한국오즈카제약은 11월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처분에 반발하여 심평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상정되면, 이 사안은 건정심에 상정되어 처리된다. 이번이 없는 한 내년 2월부터 오즈카제약 3개 품목이 0.99%~1.67%, 진양제약 9개 품목이 11.79% 인하된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총 9억원 가량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원외처방약 시장 관련 동향 (12. 18)

전체 원외처방액(7조 8,778억원)은 전년 동기(8조 3,083억원) 대비 5.2% 감소하였고, 상위 20개 제약사의 11월 누적 원외처방액은 4조 125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 1,999억원) 대비 4.5%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상위 7개 외자사의 11월 누적 원외처방액은 1조 4,29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3,886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특히 한국 BMS제약은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시장 독식에 따라, 전년 동기(1,125억원)보다 31.7% 정도 증가한 1,482억원을 기록하였다. 국내 상위 13개사의 11월 누적 처방액은 2조 5,832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 8,113억원) 대비 8.1% 감소했다. 대웅제약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3,765억원으로 시장 전체 1위를 기록했다. 동아제약과 한독약품 등의 원외처방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CJ제일제당·한림제약·안국약품 등의 원외처방액은 증가하였다.

○ 천연물 개량신약 약가 산정 방식 결정 (12. 19)

복지부는 최근 동아제약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개량신약 6개 품목의 약가를, 다른 약제와 마찬가지로 개량신약 산정기준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고심한 천연물 개량신약의 약가를 기존 합성의약품산정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국내 최초 천연물 개량신약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지엘팜텍 등 6곳으로, 이들은 스티렌의 용매(에탄올)를 이소프로판올로 바꿔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 7월 급여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그동안 약가 결정 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급여 등재를 미뤄왔었다. 이는 천연물의약품 양방 적용을 두고 한의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데, 정부는 기존 제약업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기존 개량신약 산정기준을 적용하였다. 정부는 향후 천연물 개량신약 급여 등재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엘팜텍은 현재 특허심판원에 '스티렌'의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고, 동아제약과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5. 직업단체 동향

○ 전문대학내 간호조무과 허용규칙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12. 7)

위원회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18년부터는 제도적 보안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18년부터 간호인력을 개편하려는 복지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조무사협회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들의 대학교육을 적극 권장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2년 간호조무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국제대학 측은 당장 내년부터 학과운영이 불투명해져,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대학내 간호조무과 신설을 강력하게 반발해 왔던 간호협회 등은, 개정안을 폐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치과협회 직선제쟁취, 전국치과의사연합 결의대회 개최 (12. 8)

8일 치협회관 앞에서는 직선제쟁취 전국치과의사연합 결의대회가 열려 치과의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치협을 제외한 모든 의약단체가 수장을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며, 현재 201명인 대의원은 치과이사의 단 1%에 해당하고, 연령 및 성별에서 치과의사의 다양한 민의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치협은 늘 직선제가 시기상조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고, 대의원수를 몇 명 더 늘리는 확대 대의원제로는 치과계 민주주의가 언제 도래할지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 준비위원장은 식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날 발족한 직선제쟁취 전국치과의사연합은 내년 4월 치협 대의원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2~3회 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치협은 지난 1일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선거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직선제를 포함해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정부 투쟁 태도 관련 기자회견 (12. 10)

경문배 대전협 회장은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시기 대전협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오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금 무엇보다도 전공의의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을 느끼고 있다며, 투쟁 시기 성명서 등에서 채택한 언어가 동료 전공의와 개원의들의 오해를 살 부분도 있어서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의협이 현재 내부 투쟁 동력을 이끌기 위한 취지에 동감한다며, 향후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리고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중에 지역병원전공의대표자 모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노조 활성화·표준근로계약서 단체계약 등을 성실시 실천하고, 현 의료수가 및 의료약법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한 의사비상대책위원회,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중단 촉구 (12. 12)

비대위는 청와대·교과부·복지부·새누리당·민주통합당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IMS(의사침술 처치)·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으로 한의사 면허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의과 신입생을 뽑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한의사 면허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을 때까지 교과부는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한의학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정부와 의사들로 인해, 한의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장했고, 의사들이 한의학 치료기술을 IMS라는 이름으로 갈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보험 한약제제가 85년 고시된 이후, 30년 가까이 개선되거나 품목이 늘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의사 122명, 식약청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12. 13)

이는 11월 말부터 식약청이 수일간 포털사이트의 첫 화면에 게재한 광고가 발단이 되었다. 광고는 한방 정력제(발기부전치료제)는 제조·판매가 모두 불법이니,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광고가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국민들로 하여금 한의사에 의한 진단과 처방약이 모두 불법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음해광고라고 비판했다.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방진료와 한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이고, 122인의 대표인 국승표 원장은 식약청의 한의사 죽이기 공작에 맞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위원회, 상설기구로 확대 구성 (12. 17)

의협은 진행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바른의료정책특위를, 상설위원회인 기획정책위원회(미래전략위원회)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각 정당의 공약 실천 대비·의정 협상 및 정책 입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불공정한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대국회 정치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의료계 위상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8일 정책자문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협의 정책방향 설정과 정치세력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6. 기타

○ 메사추세츠 보건당국, 뇌수막염 관련 제조사 작업중단 조치 (12. 8)

미국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제 문제로 뇌수막염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메사추세츠 소재 3군데 배합조제사에 대한 작업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오염과 멸균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이 발견되어 규제 강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첫 행정조치이다. 3개 회사는 온코메드(OncoMed)제약 서비스, 팔리메드(Pallimed) 솔루션, 위티어약국(Whittier Pharmacist) 등이다. 한편 12월 3일 현재, 고평이 연관 수막염 환자는 363명, 척수감염은 150명이 넘으며 사망한 환자는 36명에 이른다.

○ 미국 의료지 헬스데이뉴스, 의사 50% 근골격계 질환 발표 (12. 14)

이는 의료지가 지난달 '미국인간공학회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다. 미국 듀크대학 연구진은 진단클리닉에서 일하는 의사 179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사용 패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매일 병원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50% 정도가 상부 근골격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사들이 남자 의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 사용에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어깨상부·오른손 등에서 근육질의 불쾌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이 환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중유통 부적절한 제품 적발 (12. 20)

미국과 국내에서 생산된 12종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제품은 미국 'Bio Nutraceuticals'사의 '에버앤씨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등으로, 여기에는 시부트라민·페놀프탈레인·리모나반트 등 비만치료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성분들은 우울증·뇌심혈관계 질환·장기능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위 제품들은 2만 통 가량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다. 그리고 '이마트 베스트 참기름'에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보다 높은 5.1ppb가 검출되어, 이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